내년 일자리 예산 23조 어디에 얼마나 쓰이나

고용장려금 5.8조… 직접 일자리 3.8조… 직훈 2조

〈직업훈련〉

실업자 지원에 34.5% '최대 편성'
中企 고용장려지원 규모 2배 확대

내년도 일자리예산이 22조9000억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어떤 사업에 예산이 쓰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관련부처인 고용노동부는 내년 상반기 일자리 예산 65% 집행을 목표로 여성·신중년·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고용안정에 중점을 둔다는 입장이다.

13일 노동부에 따르면 내년 일자리예산은 취업취약계층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직접일자리사업은 3조8000억원(16.4%)으로 96만 명이 일할 수 있도록 돕고, 실업자·재직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직업훈련이 2조원(8.6%), 취업상담·알선을 제공하는 고용서비스가 1조원(4.3%) 규모로 편성됐다.

또한, 민간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사업인 고용장려금에는 5조8000억원(25.2%), 창업지원은 2조5000억원(10.9%)이 투자된다.

아울러 구직자들이 실업기간에 마음 놓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실업소득 유지·지원에 가장 큰 규모인 7조9000억원(34.5%)이 쓰일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상대적으로 취업 여건이 열악한 경력단절여성, 신중년, 어르신, 장애인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확대된다

아이돌봄서비스와 노인돌봄서비스 예산이 1600억 정도 증가해 올해보다 1만명 정도가 혜택을 더 받게 될 전망이다. 노인일자리사업도 올해보다 10만개 확대되고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의 경우, 2만명의 미취업 장애인들에게 공공형 일자리가 제공된다.

중소기업이 청년들을 더 많이 채용하고, 청년들은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도 확대된다.

중소·중견기업이 청년 1명을 추가 채용시 연 900만원씩 3년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는 올해 9만명에서 2019년 18만8000명으로 확대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도 올해 15만5000명이 지원받을 예산이 투입됐지만 내년에는 25만5000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예산이 확대됐다.

일·가정양립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도 확대됐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이 월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되고, 배우자 출산휴가도 '유급 3일+무급2일'에서 유급10일로 확대된다. 노동부는 중소기업의 경우 5일분 임금을 지원한다.

이 밖에 고용위기지역 지원이 강화되고,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위해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높이며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도 확대된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내년 일자리사업 예산은 취약계층의 일할 기회를 늘리면서,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중점으로 마련됐다."고 밝혔다. /세종=최신웅기자 grandtrust@metroseoul.co.kr

'이태원 살인' 유족, 범인 상대 손배소 패소

6억여원 손배소 청구 부분 각하
소송비용 일체 유족이 부담해야

'이태원 살인 사건' 피해자 고(故) 조중필씨의 유족이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3일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김동진 부장판사)는 이날 조씨의 유족이 아더 존 패터슨과 에드워드 리를 상대로 낸 6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터슨의 살해행위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에 흠결이 있을 때 심리를 거부하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패터슨의 도주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기각했다. 이번 패소로 소송 비용은 원고인 조씨의 유족이 부담하게 됐다.

이태원 살인사건은 1997년 4월 3일 당시 22살이던 조씨가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흉기로 목과 가슴 등을 약 9회 찔려 사망한 사건이다.

사건 현장에 있던 재미교포 에드워드 리는 같은해 5월 살인죄, 미군 군속 자녀 패터슨은 범행에 쓰인 흉기를 버린 혐의(증거인멸죄) 등으로 기소됐다.

이후 에드워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패터슨은 미국 도주와 한국 검찰 압송 등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1월 25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검찰은 재수사를 통해 에드워드가 공범이라고 봤지만, 한 번 처리된 사건을 다시 다루지 못한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재판에 넘기지 못했다.

이후 조씨의 유족은 수사 당국의 부실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 발견이 늦어졌다며 국가를 상대로 10억9000만원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7월 26일 국가가 3억600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부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범종 기자 joker@

국방기술과 기업육성은 입으로 하나

문형철
국방기자 칼럼

정부가 최근 강조하는 '4차산업혁명'기조에 맞춰 군 당국도 세미나 등을 통해 다양한 토의를 하고 있다. 하지만, 실수요자인 야전부대와 관련업계는 '공허한 염불'이라는 냉랭한 반응을 보인다.

기자가 만난 일선 군인들은 국방부,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ADD)의 현실성 없는 방향성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고 있었다.그들은 한결같이 "'미래를 내다보는 단계적 준비'보다 '정권의 흐름에 따른 거창한 포장'에만 급급한 것 같다"고 말했다.

몇 가지 실례를 들어 볼까한다. 개인 장병의 생존성과 전투력을 크게 향상시키기 위해 육군은 워리어 플랫폼이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ADD는 실현 가능한 추진단계보다 허상의 개념에만 집착하는 듯 하다.

지난 2011년 ADD는 2020년 까지 '미래 보병체계'를 완료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속칭 검은 쫄쫄이(전신타이즈)같은 복장에 오토바이 헬멧같은 통합헬멧을 쓴 미래보병체계는 여전히 이미지 뿐이다.

올해들어 ADD는 그림 뿐인 미래보병체계에 손목시계형 미사일을 제시했다.4차산업혁명과 연계한 개념이라고 하지만, 밑그림 없이 색만 입히는 꼴이지 않나.

전투원의 근력을 혁기적으로 강화해 줄 '외골격 시스템'도 아직은 청사진 뿐이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미래를 준비한 큰 개념을 구상하면서도 실제 연구는 현재 전투상황에 즉각 적용 가능한 부분부터 짚어가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쌓여 미래를 향한 기술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군사선진국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현재 국제방산시장에서 강한 경쟁력을 가진 나라지만, 그들이 방산시장에서 자신의 기술력을 뽐낼 수 있었던 것은 최근의 일이다. 집단농징에서 생산되는 농업국가가 어떻게 첨단 국방기술국가로 변모할 수 있었을까?

그 해답은 국방벤쳐기업을 이끌어 나 갈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이었다. 이스라엘은 상위 '탈피오트'란 특수부대를 운영하고 있다.미국의 나스닥 상장 외국 기업의 절반 정도가 이스라엘인데 이들 기업의 다수는 탈피오트 출신이 창업을 했다.

이들 탈피오트는 약 6년간 융합형 교육을 받고 자신이 배운 학문을 야전에서 필요한 과제를 통해 풀어나간다. 때문에 이들은 창의성과 즉응성이 뛰어난 인재라는 평을 듣는다.

반면, 한국은 어떤가 탈피오트를 벤치마킹한 '과학기술전문사관'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대학 졸업 후 짧은 양성과정을 마치고 ADD에서 복무한다. 야전경험도 없고 연구기회도 주어지지 않는다.

급조로 만들어진 제도가 제대로 된 성과를 낼리 없다. 입으로 국방기술·기업 육성을 입으로만 외치니 껍데기만 베껴내는 것 아닐까? /captinm@

산업부

통상교섭민간자문委 미중무역 분쟁 등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제12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열고 미중 무역분쟁 대응전략과 디지털 통상정책 추진방향 등 통상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김용래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어려운 대외여건 아래에도 올해 수출이 사상 최초로 6000억달러를 달성할 예정임을 평가하며 주요기관들의 내년도 세계경제 전망 하향 조정, 글로벌 통상정책의 불확실성 지속 등을 고려할 때 변화 흐름을 읽고 보다 치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정책 방향으로서 한미 통상관계의 안정적 관리와 함께 중국과 경제협력의 틀을 고도화해 나가고, 디지털 통상 등 새로운 통상규범 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신남방·신북방 지역 주요 신흥국가들과 전략적 경제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모두 발언에 이어 산업부는 '미중 무역분쟁 대응전략', '디지털 통상정책 추진방향' 등 2개 안건에 대해 발표했다.

미중 무역분쟁은 지난 12월 1일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표면적으로 잠시 소강상태이나, 향후 전개 방향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는 세계경기 둔화 등 리스크 요인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무역금융·수출마케팅을 활용해 수출애로 해소와 틈새시장 발굴을 지원할 계획이다.

/세종=최신웅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앞열 왼쪽 네번째)이 13일 서울 육군회관에서 열린 전역장병 취업지원 우수기업 초청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방부

軍, 전역장병 채용 위한 우수기업 간담회

롯데·한화시스템 등 초청

국방부는 13일 전역장병의 채용 활성화와 고용분위기 확산을 위해 처음으로 '장병 취업지원 우수기업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국방부는 "육군회관에서 전역예정장병들의 취업지원에 기여한 기업체 대표들을 초청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롯데, 한화시스템, KT서비스, 서희건설, 후니드 등 기업 대표 12명이 참석했다. 이들기업은 전역예정장병을 직접 채용할 뿐만 아니라 국방부의 취업지원 사업인 '국방부 전역예정장병취업박람회', '구인구직 만남행사' 등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문형철 기자

농식품부

"전국 191개 도축장 중 12곳 불합격"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191개의 도축장과 집유장에 대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운용 수준 조사를 진행한 결과, 도축장 10곳과 집유장 2곳이 재평가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179개소는 적합 판정을 받았다.

13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조사의 평가 항목은 시설, 선행요건, 위생관리 등이며 공정성을 위해 지자체와 9개 소비자단체, 대학교수,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이 조사에 참여했다.

조사 결과, 전년도 보다 집유장 HACCP 운용수준은 소폭 하락했지만, 도축장 운용 수준은 향상됐으며 재평가 대상도 전년 대비 감소했다.

/세종=최신웅 기자

법무부

'실효성 있는 집단소송제' 위한 포럼

법무부는 13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전문가가 바라본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 및 개선방향'을 주제로 '2018 선진법제포럼'을 열었다.

선진법제포럼은 각계 전문가들이 경제법령 입법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신속한 법제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결성된 전문가 그룹이다.

이번 포럼은 지난 9월 법무부가 마련한 '집단소송제 확대도입방안'을 바탕으로 실효적·합리적인 집단소송제 도입 방향과 보완 필요성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준비됐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이날 개회사에서 "집단소송제 도입은 집단적 피해의 효율적 구제를 도모하고 동시에 민사책임의 현실화를 통해 기업의 준법경영 노력을 높이고, 사전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과 기업이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집단소송제가 실제 작동할 수 있도록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에는 기존 회원뿐만 아니라 학계 전문가, 주요 기업과 로펌의 기업법무 담당자, 주요 경제단체 관련자 등도 참석했다. /이범종 기자